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의정단상



신수정  
광주시의원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 보자, 연진아.” 학교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에 나오는 대사다. 필자는 ‘더글로리’를 보면서 다양한 감정이 마음에서 요동쳤다. 현실 속 동은이는 그렇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복수의 끝은 무엇일까? 진정한 용서와 사과는 피해자, 가해자 누구의 몫일까? 인간의 폭력성은 어디에서 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현실에서는 학교폭력을 통해 몸과 마음이 부서진 피해 학생이 더글로리의 문동은처럼 괴롭힘을 당하던 체육관에 스스로 걸어가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우리 꼭 또 보자, 연진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까지 깊은 수렁에 빠진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학폭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 그것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조치일지 성찰해 봐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는 사과하는 부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모가 거의 없다고 한다. 가해자 쪽에서 흔히 말하는 ‘쌍방’으로 물고, 피해자 쪽에 ‘생활기록부 기재’ 전략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생활기록부 기재가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항간

들이 발생 상황에 대한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회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폭력 예방 담당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선생님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현장 인식 조사’ 결과 1년 동안 교직을 그만둘까 고민한 교사가 10명 중 9명에 해당할 정도로 힘든 현실 속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적 대책을 교사에게만 짊어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청은 담당 장학사나 교사에게 대한 마련과 책임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민간 교유의 전문 자원을 활용해 ‘학교폭력 관계 회복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학교폭력 관계 회복 전문가가 사건 발생 초기에서부터 개입해서 피해 학생의 마음에 공감해 치유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진정성과 책임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피해 학생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본래 학교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정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간다고 한다. 새로운 전문 인력 양성과 충원 없이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의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최우선은 피해 학생의 치유와 일상회복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의 사과와 반성, 회복을 엄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 그것은 바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빠른 관계 회복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다면 학교폭력 대상자

들이 발생 상황에 대한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회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폭력 예방 담당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선생님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현장 인식 조사’ 결과 1년 동안 교직을 그만둘까 고민한 교사가 10명 중 9명에 해당할 정도로 힘든 현실 속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적 대책을 교사에게만 짊어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청은 담당 장학사나 교사에게 대한 마련과 책임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민간 교유의 전문 자원을 활용해 ‘학교폭력 관계 회복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학교폭력 관계 회복 전문가가 사건 발생 초기에서부터 개입해서 피해 학생의 마음에 공감해 치유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진정성과 책임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피해 학생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본래 학교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정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간다고 한다. 새로운 전문 인력 양성과 충원 없이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의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최우선은 피해 학생의 치유와 일상회복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의 사과와 반성, 회복을 엄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社說

## ‘글로벌대학’ 공정하고 엄정히 선정해야

광주·전남 14개 대학 단독 신청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에 광주·전남지역 14개 대학이 신청을 마쳤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글로벌 대학’은 지방 소멸에 대한 혁신적 대책이다. 남은 심사 기간,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이 다수 선정 돼 지역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길 기대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마감한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전국 지방대 108곳이 예비지정 신청을 접수했다. 사립 일반대는 지원 가능한 대학 중 2곳을 빼고 모두 지원했고, 국립대 참여율도 80%에 달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광주에서는 전남대와 조선포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 광주교대 등 8곳, 전남은 동신대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초당대, 순천제일대 등 6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아쉬운 것은 교육부의 ‘혁신’에 대한 지역 대학의 호응이다. 교육부는 지역에 맞춰 학과를 개편한 독일 미텔 슈타트 대학, 통합으로 학과를 재배치

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퀀텀 리프(Quantum Leap·과감한 도약)’를 요구했다. 다른 대학이 도전하지 않은 과제와 방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지정 신청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대학 간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공동신청이 단 한 건이 없었다. 통·폐합이 혁신을 담보할 수 없지만 교육부의 요구가 통합을 비롯한 대학 내 체질 개선인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당장 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지역 대학이 통·폐합 없이 ‘과감한 도약’을 이뤄낼 것인지도 의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학 교육의 변화는 당연하다. 중앙이 주도하는 획일적인 지원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글로벌 대학의 취지에 맞는 대학을 엄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대학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지금 대학이 맞닥뜨린 위기는 기존 영역이나 체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파국 치닫는 노·정 갈등 이대로는 안된다

강경진압에 노조 총파업 맞불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이 한국노총 금속노동자연합회 소속 간부를 일반 교통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망루에 올라간 A씨가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에 흉기를 휘둘렀고, 어쩔 수 없이 땅으로 끌어내렸다고 한다.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A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뒤로 눌러 수갑을 채웠다.

금속노련의 이야기는 다르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 쇠파이프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망루에서 뜯어낸 것으로 방어용으로만, 그리고 방패 등에 만 휘둘렀다’는 게 금속노련의 설명이다. 분노 섞인 발언도 쏟아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계가 필요 없음을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 폭력적으로 표현했다”며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다.

그리고 31일, 광주 노동계가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열에

함류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조합원 1200여 명은 ‘노조·민생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특히 조합원들은 강원도서 노동 투쟁과 정 중 분신한 양희동 조합원과 광양서 농성 중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머리를 다친 한국노총 간부를 언급하며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이에 서울 경찰 본청에서는 상황에 따라 집회에 ‘캡사이신’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와 정부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은 사뭇 다르다. ‘강경진압’과 ‘총파업’의 맞불이다. 대화도 없고, 협의도 없다. 노조가 적이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며 정부는 탄압하는 권력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노동자가 적인가. 수갑을 채우고 곤봉으로 진압하며 캡사이신을 쏘아 할 대상인가. 그래서 얻는 것이 정말 시민의 평화인가. 만약 진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길거리로 누가 튀어나올 것 같은가. 또 다른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다. 대화할 수 있을 때 대화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결단이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 서석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지난달 31일 광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민모임은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년간 묵묵히 강제동원 피해자들 옆에 있어왔지만 최근 몇몇 보수언론들에 의해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 ‘반일 브로커’, ‘악랄한 약탈적 형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여당 대표로부터는 “보호비 명목으로 돈 뜯는 조폭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 탓일까.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국인 대표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

판결을 이끈 이들이 그대들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칭해 ‘돌덩이’라고 말하자 그 누구보다 비분강개한 이들 역시 누구든가. 바로 시민모임이다.

배상금의 일부를 받는 것은 11년 전 피해자 모두의 약속이었다. 그때는 당신들이 이길 것이라 누구도 생각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계란으로 바위를 깨고 그에 겁먹은 이들이 회유하기 위한 돈들을 지급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직접 받거나 거부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가족들이 수령하다보니, 지난 약속이 모략이라 불려지게 됨은 누굴 탓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 침묵할 때가 아니다

지 않았다고 한다. 취재를 다녀온 기자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는 듯 했다”고 말했다. 몇번인가 시민모임을 취재하면서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하나 이 지면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구절절 말하지 않겠다.

다만 묻고 싶다. 왜 침묵했는가?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맞서 싸워야 할때다. 나라가 독립을 되찾은지 70여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외면한 사람들이, 100엔 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롱하던 일본의 기업과 맞서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모임과 그 후원자들을 흔들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되레 ‘인정함’과 다를바 없다.

고 이금주 회장과 더불어 국가에서 버림받고 일본에게서도 거렁뱅이 취급 받아가며 약착같이 싸워 대법원 배상

잡고 싸우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조폭’이 되고 ‘브로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처 어느 정신 나간 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수십년전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편에 서겠는가. 그럴 바엔 차라리 보수 우익 단체의 색을 띠는 게 훨씬 쉬웠을 터다.

되집어보면 그대들이 얼마나 맹렬히 싸워왔기에 여당 대표가 친히 나서서 광주시에 주소를 둔 상근직원 돌밖에 없는 조그마한 시민단체를 겨냥하겠는가.

그러니 당당히 가서 말하라. 당신들을 고소한 이들에게 그대들이 어떻게 싸워왔고, 어떤 기적을 만들었으며, 누구를 대변해 왔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고개를 곧추 세우고 말해야 한다.

노병하논설위원 겸 사회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